

“최 권한대행 직무유기 도 넘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최 대행,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명령해야... 내란 조기종식이 민생 살리는 길”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이하 전북혁신회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1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혁신회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체포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수처의 적절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과 경호처가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은 13일 느닷없이 여야 정당을 방문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며 말했다.

이어서 “이는 심각한 본질 호기기일 뿐 아니라, 최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를 드러내는 일어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대통령 경호처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최 대행은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제2기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혁신회의의 관계자들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로서 최 대행이 앞장서서 법질서 문란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혁신회의는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경호처 경호관들이 소총은 물론 기관단총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경호처의 불법행위는 최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에 힘입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은 여야 정당을 방문해 시민이 다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며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같은 직무유기와 내란동조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므로 “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에 적극 협조해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물리적 불상

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첩경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약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적 유린행위를 이대로 방조할 경우, 민약의 불상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또한 내란 동조행위로서 국민의 심판과 법적인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사무대포 방용승)는 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집권을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2023년 6월 4일 공식 출범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이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산하 조직인 전북혁신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이원택 위원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종식과 정권교체를 위해 제2기 발대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형법’에 따른 내란·외환죄 수사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 거부 불가

민주 윤준병 의원,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규정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윤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은 때에만 소속 공무원 또는 당해 감독공무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1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안락차기개발사업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 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받았듯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난대응 부서를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대립이라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군산시의회의는 시민 여러분 곁에서 시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의결

김제시의회가 14일 임시회를 개최해 2025년도 새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첫날인 14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뒤 2층 소회의실로 이동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서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의회는 2025년도에도 김제시의 미래와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히면서 “모두가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활성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정성 대상주식회사 중기IPO부부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7개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중 처음으로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후계농 자금 부족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위해 범정부·범국회 차원 지원 필요”

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 농연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억원(중액 시 신규 대출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가능) 증액을 의결했으나 여야 갈등이 깊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불발되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처럼 정 차원의 발고트 싸움이 후계·청년 농업인의 발목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국회와 재정 당국의 안일함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재원이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문

전망에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 수준만 반영됐다.”며 예산 증액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그간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안타깝게도 이후 변경안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것은 농정 당국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며, “다만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지방소멸,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한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범정부·범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농정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후계·청년 농업인 정책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4일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먼저, 박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핵정국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인한 아픔을 딛고 을사년(乙巳年) 새해

에는 정읍시민 모두 새 희망을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는 민생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정 보고가 있었으며, 황해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 규탄”

민주 도당, “고교 무상교육,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외면하고 예산을 99.4% 삭감하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앗아갔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

아야 하며, 이는 지역 교육과 지방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복지와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고,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교육의 평등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은 민생의 기둥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초석으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농민 의견 수렴을”

민주 도당 “정책 검토 신중히”

남아도는 쌀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에서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신중한 정책 검토와 함께 농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 노창득 위원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하여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노창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주요 비판 대상이다.”며, “국내 쌀 소비 감소와 국제 곡물 시장의 변화 등의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패널티로 공공

비축미 배정 제외,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 및 SOC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는 패널티 중심 접근이 아닌 인센티브 확대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큰 폭의 쌀값 하락으로 인해 쌀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생적 실정을 반영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패널티 위주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 쌀 전업농 등 농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